

민주, 당헌개정 재추진에 갈등 증폭

‘기소 시 당직 정지·당무위 구제’ 재상정

박용진, 토론 위한 대면중앙위 개최 요구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개정을 놓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는 모습이다. ‘기소 시 당직 정지·권리당원 투표 우선제’를 골자로 한 당헌(80조·14조) 개정이 예상과 달리 지난 24일 당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위에서 부결되면서 갈등 양상이 선명하게 부각되는 양상이다. 특히 비상대책위원회가 권리당원 투표 우선제를 제외하고 ‘기소 시 당직 정지·당무위 구제’를 핵심으로 하는 당헌 80조항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면서 비명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부재의 원칙 위반"이라며 박 후보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박 후보는 비대위가 26일 중앙위를 열겠다고 한 것을 두고도 “당무위 의결도 없이 중앙위를 다시 열겠다고 공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위를 다시 소집해야 한다면 안전에 대한 찬반 표시만 가능한 온라인이 아닌, 질문과 토론이 가능한 오프라인 중앙위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다. 비명계는 이 같은 절차는 물론 당헌 8

0조1항의 내용에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개정안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당무위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조용천 의원은 MBC라디오 ‘김중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당무위의 의장이 당대표”라며 “그사람이 키를 트는 데로 (결론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를 수사로부터 보호하려는 방탕용 위인설법’ 등 비명계가 그간 주장해 온 ‘이재명 사당화’와 같은 맥락이다. 반면 친명계는 박 후보 등의 주장에 결국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세인 판을 흔들어 보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

친명계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정치 탄압이 인정될 경우 당직 정지를 취소할 수 있는 주제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바꾸는 정도가 무슨 실익이 있나”라며 “(기소 시 부당용) 확실하 완화해주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에게 특별히 유리하지 않은 당헌 개정에 ‘이재명 사당화’라는 프레임이 씌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헌 개정 재추진을 강하게 비난하는 비명계와 달리 친명계는 상대적으로 ‘로기’로 대응하는 분위기다. 이번 사안이 이 후보가 크게 앞서도 있는 당 대표 경선의 향방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마지막 인사하는 민주당 지도부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들과 함께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與 ‘이준석 탄원서’ 두고 유출 공방

홍준표 “독가시 품은 선인장을尹이 어떻게 품겠나”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자필 탄원서’ 여진이 25일에도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사’라 칭하며 ‘신군부’에까지 빗대 당내 파문이 인 데 이어 이번에는 탄원서가 공개된 경위를 둘러싸고 유출 공방이 벌어졌다. 이 전 대표 측은 탄원서가 공개되자 당내에서 탄원서를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며 ‘셀프 유출, 셀프 격앙’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공적인 절차를 통해 제출한 문서인데 유출이 아니고

그냥 공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누가 유출했는지 제가 알 바 아니고, 관심도 없다”며 “유출이라는 용어도 틀렸다. (탄원서를) 바깥으로 공개하는 게 불법도 아니고, 법률상 금지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채무자 측이 유출한 게 맞군요. 유출하지 않았다는 주장보다는 ‘유출해도 뭐 문제냐’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유출한 건) 문제”라며 “상대방 탄원서를 언론에 열람용으로 유출하는 행위는 전무후무할 것”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이준석계’인 국민의힘 신인규 전 상근부대변인도 탄원서가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법원에 개인적으로 제출한 것이고 소송자료에 해당한다”며 “어떻게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지 강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탄원서를) 송달받은 주체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는데 이분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된다”며 “누가 유출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발(發) 내홍’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탄원서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당내는 별집을 쫓겨하는 듯 어수선한 모양새다. 이 전 대표를 둘러싼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다. 연일 이 전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이 전 대표가 연일 막말, 극언행진을 하고 있다”며 “독가시를 품은 선인장이 돼버린 이 전 대표를 윤 대통령 측에서 품을 수가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 전 대표와 가까운 하태경 의원은 윤 대통령과 이 전 대표 간 “타협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솔직히 대통령이 이 전 대표를 쫓아내는 사태를 실질적으로 주도하지 않았다”고 본다”며 “당내 주류 세력들이 주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치적 타협의 여지가 아직 완전히 죽은 건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승남 ‘김산업연구소 설립’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5일 “김산업 연구소 설립과 운영 지원을 위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김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해 2020년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산업법은 단일 수산물품 진흥을 위한 국내 최초의 제정법이다. 2020년 12월 1일 국회 본회의의 통과 이후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케이푸드인 김은 지난해 114개 국가에 6억9천만달러 수출돼 우리나라 수출 식품 중 1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현재 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는 국립수산물학원 해조류연구소



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센터는 김 외에도 미역과 다시마 등 해조류 전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센터의 연구분야가 김종자 관련 연구에 집중돼 있어 생산, 가공, 유통 등 김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전문인력 양성 기관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김산업연구소 설립을 통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가 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박홍근 “한동훈, 국민에 정면 도전”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관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총회에서 “삼권분립을 망각한 윤석열 정부, 법 위에 시행령 통치를 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면서 “이는 국회를 넘어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입법예고 기간에 검사의 수사 개시 확대 관련 시행령을 내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역행하는 초헌법적 시행령 쿠데타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법’ 붕괴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한 장관의 행태를 보면 국민에게 봉사하는 장관이 아니라, 검찰 조직을 대표하고 검찰을 위해 봉사하는 검찰부 장관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전 법무부 장관인 박병계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한동훈 장관 스타일이 네가지가 있다”며 “말이 되지 않는 표현을 하는 등 우기기, 거짓말하기,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흐리는 물타기, 의원들 질문은 질문 같지 않다는 오만함”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수기자

국힘, 연찬회 총출동 ‘전열정비’

당 진로 설정·차기대표 선출 로드맵 주목

국민의힘이 25일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한 연찬회를 개최하면서 최근 당내 혼란상에 마침표를 찍고 전열을 재정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연찬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열흘 만에 치러지는 행사다 보니 향후 당 진로 설정과 차기 지도부 선출 계획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최대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가 처분 신청’과 관련한 법원의 결론을 앞둔 상황이란 점에서 이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방향도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연찬회 첫날에는 이지성 작가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윤희숙 전 의원이 각각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정당을 만드는 법’,

‘연금개혁 쟁점과 방향’, ‘다시 뛰는 대한민국 경제’를 주제로 강의한다. 둘째 날인 26일에도 분임토의와 자유토론이 이어진 다음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마무리 발언으로 연찬회는 막을 내린다. 최근 당 혼란상에 대한 반성과 함께 민생을 위한 헌신의 노력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도 채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출범 이후 당내에서는 차기 당권 구도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보니 이번 연찬회에서도 지도부 선출 로드맵에 대한 총의가 모일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특히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김기현·안철수 의원이 자신의 특성과 직결되는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놓고 연일 이견을 노출하면서 신경전이 점점 가열되는 상황이라 더욱 관심을 끈다. /김진수기자

www.e-dk.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

DK 디케이 주식회사